

한반도의 새로운 포용담론을 찾아서

한반도 세계시민과 평화·통일 교육

기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병호 이향규

엄현숙 Dan Gudge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부



RUSSIA

MONGOLIA

CHINA

Philippines

PHILIPPINES

MALAYSIA

INDONESIA

AUSTRALIA

Ulaanbaatar

Khovd

Ulaanbaatar

Chengdu

Xian

Zhengzhou

Lumbini

Kathmandu

Thimphu

Varanasi

Kolkata

Dacca

Mandalay

Chiang Mai

Vientiane

Nanning

Hanoi

Haiphong

Macau

Yokohama

Manila

Tagaytay

Yangon

Phnom Penh

Phnom Penh

Phnom Penh

Phnom Penh

Phnom Penh

Phnom Penh

Phnom Penh

Phnom Penh

Phnom Penh

Phnom Penh

Phnom Penh

Phnom Penh

Phuket

Langkawi

Langkawi

Langkawi

Langkawi

Langkawi

Langkawi

Langkawi

Langkawi

Langkawi

Langkawi

Langkawi

Langkawi

Kuala Lumpur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Jakarta

Bandung

Bandung

Bandung

Bandung

Bandung

Bandung

Bandung

Bandung

Bandung

Bandung

Bandung

Bandung

Palau

Koror

Koror

Koror

Koror

Koror

Koror

Koror

Koror

Koror

Koror

Koror

Koror

Cocos (Keeling) Islands

Australia

Australia

Australia

Australia

Australia

Australia

Australia

Australia

Australia

Australia

Australia

Australia

한반도 세계시민과 평화·통일교육

기 획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은이 | 정병호 이항규 엄현숙 Dan Gudgeon

펴낸 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 이 | 한경구

펴낸날 | 2021년 12월 10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화 (02) 6958 4164

sc.team@unesco.or.kr

www.unesco.or.kr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ISBN 979-11-90615-26-6

한반도의 새로운 포용담론을 찾아서
한반도 세계시민과 평화·통일교육

일러두기

- 이 책은 교육부가 후원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한 '2021 시민교육 연계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세계시민성 부문)'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동 출판물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현장 전문

이 현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인류 역사를 통해 상호간의 생활양식과 삶에 대한 무지는 사람들 사이에 의심과 불신을 가져온 공통적 원인이었으며 이러한 상호간의 차이 점들이 너무도 자주 전쟁으로 이어져왔다.

이제 막 끝난 가공할 대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고, 대신 무지와 편견을 통해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주의를 확산시킴으로써 발생된 사건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 관심과 협력의 정신으로써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오로지 정부 간 정치적·경제적 타협에 근거한 평화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현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지고 객관적 진리가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며 사상과 지식이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소통수단을 발전시키고 증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기 위하여 이 소통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그 결과 당사국은 국민들의 교육·과학·문화상의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그 현장이 선언하고 있는 국제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기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창설한다.



머리말

통일이란 무엇일까요? 통일에 대한 여러 시각과 의견이 있겠지만, 통일이란 다양성이 만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주민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그리고 현재와 미래 한반도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지금보다 더 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을 다양성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한다면, 평화·통일교육의 지향점은 단순히 남과 북의 제도적 통합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넘어서 지금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량을 키워주는데 있습니다. 폐쇄적 민족주의나 사회의식으로는 북한 주민과 통합 전에 점차 다원화 되어가는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은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매우 상호의존적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는 서로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한국의 경제는 대외의존도도 높아서 세계의 어느 곳에서 일어난 일이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위기는 곧 다른 나라의 위기로

번져, 점차 모든 인류가 운명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반도 세계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한반도의 특수성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포용 담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은 인권과 민주주의 못지않게 우리의 생활과 미래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민족과 국가를 강조하는 교육과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한국인들에게 세계시민이란 여전히 머리로는 납득하기 어렵고 가슴에 와닿는 개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세계시민의 이념과 가치와 내용을 교육하고 그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한반도 세계시민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신 네 분은 모두 자신의 삶 속에서 남과 북, 한반도와 세계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현장에서 활동해오신 분들입니다. 한반도 세계시민으로 살아온 삶

과 그 삶 속에 담겨 있는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고민을 통해 우리사회의 평화·통일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



차례

한민족 다문화와 한민족 세계시민 10

정병호 |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문화인류학

바뀐 자리에서 다시 보기 23

이향규 | 런던한겨레학교 교장

북한 여성의 '이주', 그리고 평화·통일교육..... 34

엄현숙 |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원

평화교육, 평화라는 퍼즐을 맞춰가는 49
희망의 한 조각

Dan Gudgeon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문위원



한민족 다문화와 한민족 세계시민

정병호 |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문화인류학

우리 민족은 외세 침략과 식민, 전쟁과 오랜 냉전의 역사적 아픔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근대사를 통해 다양한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던 경험을 통해 각 사회에서 내면화한 각기 다른 국민적 정체성과 역사적 경험,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다양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은 단일민족신화로 인해 동질적인 혈통, 언어, 문화집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국민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남과 북을 비롯한 국가 간 갈등과 대립 속에서 서로 경계하고, 차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권력과 체제 이념에 의해 단절되고 굴절된 삶을 살아온 민족 구성원들 간의 평화와 상호 이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민족의 다국가적, 다문화적 현실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민족 세계시민’으로서 화해와 공존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한민족 이산의 역사와 다문화 현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 한민족 이산의 역사와 한민족 다문화

한민족 이산(離散, Korean Diaspora)의 역사는 국권을 상실하기 시작한 조선왕조 말기에 살길을 찾아 만주와 러시아의 연해주, 하와이와 멕시코로 떠난 사람들의 애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 아래 한반도를 떠나 북간도, 서간도로 이주해 대륙을 떠돌며 황무지를 개척한 사람들, 징병과 징용, 정신대로 사할린과 홋카이도, 규슈의 탄광과 동남아와 남태평양의 섬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 독립을 위해 해외에서 투쟁하며 살아 온 사람들은 해방 무렵에는 당시 한민족 구성원의 약 1/5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해방과 더불어 분단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의 국민이 되거나, 무국적자로서 오늘날까지 살면서 초국가적인 한민족의 역사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패망으로 시작된 전후 동아시아의 냉전체제와 새로운 국경에 막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거주하게 된 국가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으로서 전쟁터와 일터로 끌려갔다가 전쟁에 지자 다른 민족 출신이라고 하루아침에 '외국인', '제3국인', '난민' 신분이 되어버린 '재일 동포', 소련 영토가 된 사할린에서 '무국적자'로 억류된 '사할린 동포',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의 사막으로 끌려갔다가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와 더불어 독립한 신생 국가들의 소수민족이 되거나 러시아 사회의 무국적자가 된 '고려인', 중국의 국공내전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소수민족으로서 중국 국민이 된 '조선족' 등으로 부르지게 되었습니다. 해방과 전쟁 과정을 계기로 한반도 역사에 깊이 개입하게 된 미국으로도

유학과 국제결혼, 해외 입양을 통해 이주가 시작되어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국, 유럽, 남미 등지로까지 이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한민족의 근대사는 이렇게 대한민국(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사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국민국가의 영역에 걸쳐서 그 경계를 넘나들며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민족 다문화 상황과 초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한민족 구성원의 평화로운 공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세기 동안의 식민과 분단, 전쟁과 냉전의 전 시기에 걸쳐서 한민족 정체성을 공유하며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역사에 개입한 주변 국가에 편입되어 살아오던 사람들이 탈냉전의 시대를 맞아 다양한 경계를 넘는 교류와 재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약 반수는 주변 강대국의 소수민족으로 살다가 최근에 귀환 이주한 한민족 구성원들입니다. 외국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할린 귀환 동포와 조선족 국적회복자, 재외동포 출신 귀화자, 북한이탈주민까지 합하면 이주민 인구의 절대다수는 한민족 이주민들이고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과 남북한 사이의 탈냉전 상황이 본격화될수록 그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산과 이주는 송출국에서 거주국으로의 일방향적 이동이 아니라 1차 거주국에서 2차, 3차 거주국으로, 또는 다시 송출국으로 귀환하거나 상시 교류하는 복합적이고 다방향적인 이동 행위입니다. 한민족 이주민들은 다양한 국민국가의 소수자, 주변인으로서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 전략적, 실천적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초국가적 삶의 역사와 다

문화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민족, 문화를 동일시하고 그것의 일치를 이상화해 온 단일민족국가의 '단일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국민국가 중심의 편협한 '정통 국사' 개념은 극복하여야 합니다.

특히 '민족'과 '국민'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혼란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한 민족은 꼭 한 나라에 살아야 한다거나 한 민족은 반드시 공통된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민족(또는 한민족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이 소외시키는 경계인은 무려 천만 명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 민족 두 국가 상황까지 고려하면 한민족 구성원의 약 반수인 3천5백만 명이 잠재적 경계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의 해외 동포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추정하는 재외동포는 무려 194개국에 걸쳐 7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은 출입국 심사 때부터 KOREAN 창구에 서지 못하면서 이런 현실과 마주치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이 250개국 출신에 22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글로벌한 민족이고, 글로벌한 국민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민족과 국민이라는 개념에 속하지 못한 채 경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족과 국민이 하나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인위적 장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민족과 국민은 어떻게 다른가

'민족(ethnicity)'과 '국민(nation)'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현실을 만들

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화인류학에선 민족이나 국민이 모두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같은 집단의 사람들이라고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국가(state)'도 상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상이라고 해도 허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족, 국민, 국가가 실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상의 실체가 되었다는 게 문화인류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연 질서보다도 더 강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묶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조국을 지키게 만드는 게 바로 민족·국민·국가와 같은 개념들입니다.

아주 오래된 것 같이 생각하는 '국민(nation)'이라는 개념은 사실 근대적인 발명품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왕이나 영주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비주체적인 상태,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주권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독립 혁명과 독립선언을 시작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영국 국왕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며 아메리카 대륙에 모인 유럽의 다양한 출신들이 모여서 미국이란 국가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인종, 민족, 언어보다 중요한 개념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땅(국토)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혁명을 계기로 자유·평등·박애(우애)라는 이상을 표방한 시민 개념, 국민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국민)들은 누구나 함께 평등하고 자유롭게 형제자매의 우애로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프랑스혁명 이후에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프랑스혁명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국가(nation-state)'를 만들게 됩니다. 이

렇게 시민적 정체성을 강조한 ‘시민국가주의(civic-nationalism)’와 다르게 독일이나 일본 같은 후발 국민국가들은 민족 정체성을 강조한 ‘민족국가주의(ethno-nationalism)’을 강조하면서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민족이나 국민이라는 개념은 상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회 주류집단이 편의에 따라서 또는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가 자기 집단에 속하는지 그 기준과 척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국가시대에 그렇게 변화하는 경계에 의해 배제된 사람들은 국민 또는 민족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차별받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분단시대의 남한 사회에서도 민족과 국민 개념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유신시대에 의무적으로 암송해야 했던 국민교육헌장의 첫머리입니다. 일본 메이지 천황의 ‘교육칙어’를 본뜬 국민교육헌장은 분단국가의 사상통합과 ‘국민’ 정체성 확립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했습니다. “민족”이란 단군의 자손, 배달겨레 모두를 뜻했습니다. “이 땅”은 물론 남한 땅이었습니다. 북한과 해외에 동포들이 살고 있지만 이들은 언젠가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흩어진 민족을 통일하는 일, 그것이 민족사의 중심지인 이곳, 남한에 “태어난” 사람의 역사적 사명이었습니다.

혈연 공동운명체로서 민족 개념은 탈냉전 시기에 중국에서 들어 온 조선족을 만나면서 흔들렸습니다. 핏줄보다 이른바 ‘국적’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남한 사회는 가까운 친척이자 같은 말을 하는 조선족을 ‘중국 사람’이라고 차별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국적을 지키며 살고 있는 재일 동

포를 우리말이 서투르다고 ‘반쪽말이’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언어’를 온전한 민족 구성원의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여겼습니다.

한편 2000년대부터 남한에 와서 살기 시작한 탈북민 중에는 사회적 차별이 무서워 스스로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북한 출신보다는 중국 출신이 덜 업신여김 당한다고 합니다. 출신국의 ‘경제 수준(GDP)’이 그 집단을 차별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남한 사람들이 민족통일은 더 이상 당연한 민족 과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격한 경제적 차이를 다른 무엇보다 큰 부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범주와 정체성은 더 이상 신성한 혈통이나 반만년 문화 전통 같은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남한 주류집단의 민족 개념은 시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매우 급속하게 변했습니다. 경제 수준과 문화 차이에 따라 이기적인 기준을 들이대어 ‘우리’와 ‘남’을 가르고, 정통과 아류를 구별하며, 중심과 주변을 서열화했습니다.

■ 한민족 다문화의 현실과 과제

한민족이 아닌 이주민이 늘어나자 국민의례에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조국과 민족” 대신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충성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이주자와 자녀에게 국민으로서 통합을 요구하면서 민족 자격은 결핍된 ‘2등 국민’으로 여기고, 한민족 이주민들은 ‘국민’ 자격에서 배제하거나, 다시 귀화해도 문화적으로 결핍된 존재로 차별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객관적 정치조직으로서 ‘국민’과 주관적 문화 공동체로서 ‘민족’을 엄밀하게 구별하여 개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대적 민족 정체성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 냉전 체제 속에서 남과 북 2개의 국민국가와 주변 4대 강국의 소수민족으로서 다양한 ‘국민’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일치할 수 없는 국경과 민족 경계선 사이에서 단순히 정치적 담론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새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계인과 소수자들이 정체성의 혼란과 실존적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복합적 한민족 집단의 민족/국민 정체성을 문화상대주의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민족=국민’의 도식을 넘어선 민족과 국민 정체성의 다중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초국가 민족 정체성’과 ‘초민족 국민 정체성’ 개념을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 망명자, 이주노동자가 겪는 차별 구조 해체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민족 정통성을 경쟁하면서 스스로 중심을 표방하고 있는 남과 북 두 개의 국민국가가 단일민족국가의 이념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분단된 남과 북이 정치적 통일을 이루기 전에 만남과 교류,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공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긴요한 일입니다.

사할린 귀환이주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고려인, 재미 동포, 재일 동포, 중국 조선족, 북한이탈주민 등 지리적으로 다른 국민국가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정치 이념, 경제체제, 문화 환경 속에서 생활한 사람들 개개인의 ‘삶의 역사’ 속에서는 ‘한민족성(Korean ethnicity)’이라는 공통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상된 것이며 모순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이 있다

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성’을 공유한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른바 ‘다문화적’ 이주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식상의 혼란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환 이주 한인과 재외한인들은 지금까지 중심(조국)과 주변(거주국)을 위계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차별적 관념에 의해 ‘주변인’ 또는 ‘경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북한 주민과 탈북 이주민들도 이념적 대립에 의해 ‘주적’ 또는 ‘위험한 사람’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의식과 경계심은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공존의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와 유사하면서도 더욱 심각한 차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민족 귀환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법적으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도 남한 사회의 주류집단인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서 타자화, 주변화 되어 ‘2등 시민’처럼 사회문화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차별 체감도는 한국 내의 다문화 이주민 집단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한 사회의 원주민이 모두 주류집단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분단과 냉전적 사상 대립과 이념 갈등으로 인한 연좌제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시민권을 억압당하면서 한국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국민들도 존재합니다. 주변화된 남한 주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초국가적 이주민이 되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재일 동포 중에는 제주에서 국가폭력을 피해 이주한 사람들이 많고, 재미 동포 중에는 북한 출신 실향민과 미군과 국제결혼을 한 여성의 가족 이민자가 많습니다. 이들은 이주한 나라에서 가족관계와 다양한 연줄 관계(혈연, 지연, 학연, 교회

연 등)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연결망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인 재일 동포나 재미 동포 중에는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국적법 등으로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전쟁 후 최근까지 총 20만(재미 동포 인구의 약 1/10)에 달하는 해외 입양 고아들은 이미 법적으로 다른 나라 국민이고, 언어문화적으로도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초국가적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민족 정체성을 재확인하고자 귀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 의해 주변화된 경험이 있는 다양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아울러 대한민국의 주류집단도 개인사나 가족사의 영역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초국가적인 교류와 이주를 통해 사회문화적 자본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초국가적 한민족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들 개개인의 역사를 재구성해보면 한민족 이산과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초국가적 한민족의 문화 다양성의 깊이와 폭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국(중심)과 거주국(주변), ‘우리’와 ‘그들’이라는 위계적이고 배타적인 이분법적 틀로 한민족 또는 대한민국 국민 집단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이동과 세계적 연결망 위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초국가적 한민족 구성원들이 함께 서로의 삶과 생활을 이야기하고 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가권력의 공식적 역사를 넘어선 민족 구성원으로서 개인적 삶의 역사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화해하는 공감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반도와 대한민국 국경 안에 머물렀던 국민국가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서 다양

한 국가와 폭넓은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코리안의 삶과 역사와 국민적 정체성을 넘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 한민족 다문화와 세계시민

경계를 가로지른 초국가적 이동이 보편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민족, 국가, 국민, 시민, 주민 개념에 대한 재인식과 한민족 다문화 현실에 대한 사회적 성찰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경계를 넘는 한민족 구성원들의 역경을 이겨낸 강인한 삶이 주는 감동을 바탕으로 한민족 이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양한 다른 이주자 집단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세기의 불행한 식민과 탈식민, 전쟁과 냉전, 이산과 귀환으로 굴절된 삶을 강요당해 온 국민국가 시대를 넘어서, 21세기의 과제인 남과 북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문화통합, 한민족 다문화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서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란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우리 민족은 무엇보다도 ‘평화’를 만들고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이 필요합니다. 국경과 이념에 의한 단절과 이산의 아픔을 경험한 우리 민족은 ‘초국가적’인 만남과 나눔을 통한 ‘치유의 탈근대사’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족 지배와 민족 차별의 역울함을 아는 우리 민족은 다른 사람을 계급·성별·민족·인종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 세계시민으로서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을 이해하

고 돕고 나누며 살 수 있는 성숙한 민족이 되어야 진정 품격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 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弘益人間: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이란 가치는 대단히 훌륭한 것입니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침략과 정복을 추구하는 거대 민족의 제국주의적 가치가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보다 스스로를 잘 돌보고 주변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는 문화 공동체로서 초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한 한결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민족, 자기 문화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인류 사회와 폭넓게 교류하면서 늘 새롭게 자기 혁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결을 더 나아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현대 인류문화가 빛은 지구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는 한민족 문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 권현익·정병호 (2013).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파주: 창비.
- 박명규 (2011). 노스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북한주민의 해외탈북이주와 정착실태.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박준규 (2002). ‘미주한인’의 디아스포라적 아이덴티티. 역사비평, 58(봄), 300-321.
- 유명기 (2002). 민족과 국민 사이에서: 한국 체류 조선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35(1), 73-100.
- 윤인진 (2004).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정병호 (2019). 민족과 국민 어떻게 다른가. JTBC <차이나는 클래스> 제작진. 차이나는 클래스: 과학·문화·미래 편. 서울: 중앙북스.
- 정병호 (2020). 고난과 웃음의 나라: 문화인류학자의 북한이야기. 파주: 창비.

- 정병호·송도영 엮음 (2011). *한국의 다문화 공간*. 서울: 현암사.
- 정병호·전우택·정진경 엮음 (2006).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한건수 (2006). 민족은 국가를 넘을 수 있는가. *황해문화*, 51, 70-82.
-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y: Reflection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Castles, Stephen., & Alastair, Davidson. (2000). *Citizenship and Migration: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New York: Routledge.
- Cohen, Robin. (1997). *Global Diaspora: An Introducti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Gmelch, George. (1980). Retur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9, 135-159.
- Ong, Aihwa. (1999).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바뀐 자리에서 다시 보기

이향규 | 런던한겨레학교 교장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를 그냥 가볍게 여기게 되는 표현이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도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였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간단하다. ‘자리를 바꾸어 그것을 생각한다.’ ‘그것’에 들어갈 말은 많다. 다른 사람의 입장, 생각, 말, 행동, 마음, 감정 같은 것들. 영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 봐라(Put yourself in other’s shoes).” 이것도 말만큼 쉬운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으려면 내 신발부터 벗어야 할 텐데, 그것부터 어려운 일이다. 사는 데 불편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굳이 내게 편한 신발을 벗을 이유가 없다. 나도 그랬다.

우리 가족은 2016년에 한국에서 영국으로 이주했다. 땅이 바뀌었다. 나는 한국에서 대학과 연구소에서 ‘북한이탈주민’이나 ‘결혼이주여성’ ‘중도입국청소년’과 같은 ‘이주민에 대해’ 연구하고 지원하는 일을 했다. 그들의 삶을 내가 익숙한 언어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도우려고 했다. 나는 질문하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영국에 오자 자리가 바뀌어 내가 ‘이주민이’ 되었다. 그것만 해도 큰 전환인데, 얼마 전

에는 런던한겨레학교 교장이 되었다. 우리 학교 학부모는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다. 평생 남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영국에 사는 ‘탈북민’ 커뮤니티 속으로 훑 들어가면서, 내가 선 자리는 다시 옮겨졌다.

선 곳이 달라지자, 풍경이 바뀌었다. 바뀐 풍경 속에서 내가 마주 보고 있는 것은, 그동안 그들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설명하고, 동정했던 나 자신의 모습이다. 나는 이제 신발을 바꿔 신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위치는 바뀌었지만, 내 마음속에 구별 짓기는 아직 남아 있다. 내게 익숙한 신발을 아직도 엉거주춤 걸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살펴보고 성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 질문해 본다. 상대의 자리에서 보면 무엇이 보일까? 그때 나는 공정했던가?

■ 남한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에서 ‘탈북청소년’ 지원 기관에서 일할 때였다. 우리 팀에서 같이 일했던 A선생님은 ‘탈북민’이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나였다. A선생님이라면 탈북청소년의 처지를 잘 이해할 것 같고, 북한에서 교사였던 그의 경력이나 탈북민 커뮤니티의 도움은 우리가 하는 일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A선생님은 남다른 열성을 보이며 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움이 생겼다. 어떤 일은 팀원이 다 같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가야 했는데, A선생님은 다른 (남한 출신) 직원들과 생각이 다른 적이 많았다. 일터에서 업무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고, 그걸 잘 조정하면서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팀장의 역할일 텐데, 나는 일에 자꾸 감정을 실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그냥 애초에 ‘우리끼리’ 하면 더 업무가 수월했을 텐데, 괜히 ‘당사자’를 끼워 넣은 것은 아닐까 후회한 적도 있었다. 그게 티가 났나 보다.

일찍 출근한 어느 날이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A선생님이 벌써 와 있었다. 인사를 하고 내 방에 들어가려는데, 그의 목소리가 뒤투수에 날카롭게 꽂혔다. “나도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팀장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 설명 없이,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이 쏟아진 말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참고 있던 숨을 내쉬듯 단숨에 말했다. 내가 뭐라고 대꾸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다. 처음에는 당황했고 곧 언짢아졌다. 그래서 그간 나의 태도를 돌이켜 보기보다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북한 사람의 특징에서 답을 찾고 그들의 무례함을 탓했다.

내게도 기회가 있었다면

런던한겨레학교는 런던 외곽 뉴몰튼이라는 한인타운에 설립된 한글학교이다. 영국에는 북한 사람들이 1,000명쯤 산다고 한다. 2005년 즈음부터 난민 신청을 하는 북한 사람들이 생겨났다. 지금까지 약 700여 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세월이 지나 이제 모두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정착했다. 이들은 자녀들의 한글 교육, 민족 정체성 교육을 위해 2016년에 학교를 만들었다. 학교 건설의 주역들을 가까이서 보니 존경심이 절로 일었다. 그들의 헌신과 능력은 놀라웠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절로

일었다. “고 선생님이 남한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좋은 교육자가 되었을 텐데...” “최 선생님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친절한 의사가 되었을 텐데...” 이 생각 끝에 잊고 있었던 A선생님의 말이 따라 올라왔다.

“나도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이 말은 사실 나를 향한 비난이 아니었을 지도 모르겠다. 그건 기회에 대한 항변이었을 지도 모른다. 남한 사람들이 대부분 누리는 (나도 크게 누렸던) 삶의 기회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북한에서 경험한 결핍에 대한 좌절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내게도 기회가 있었다면...”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때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하나도 읽지 못했다. A선생님 말대로 그가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더 좋은 팀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일에 대한 헌신 면에서 그는 나보다 한참 앞서 있었다.

■ 어디서 왔어요?

출신이 궁금한 것은 인지상정일 거다. 생김새가 다르면 나도 궁금했다. 한국에서는 그냥 물었다. “어느 나라 분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별생각 없었고, 사람들은 선선히 대답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Where are you from?” 이것은 정주민이 이주민에게 하는 질문이다. 나는 질문하는 사람에서 질문받는 사람으로 바뀐 위치를 새삼 확인했다.

남편도 이 질문을 받았다. 그는 영국 사람이지만 호주, 일본, 한국에서 거의 한평생을 살아서 억양이 여느 영국인과는 달랐다. 사람들은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왔다고 확신하고 물었다. 그가 한 살 때 남아공에서 살았다고 말하면,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얼

굴로 만족해했다. 사람들은 생김새나 억양으로 굳이 이방인을 구별해 내고, 그 사람을 자기가 추측한 집단에 끼워 넣었다.

어디서 왔냐고 묻는 사람에게 무슨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다르니까 궁금해서 건네는 별 뜻 없는 말일 거다. 그런데 질문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어디서 왔냐고 물을 때마다 나는 내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 유쾌하지 않다. 사실 길에서, 가게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꼭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게 왜 궁금하세요?” 라고 까칠하게 묻은 적도 있고 “그러는 당신은 어디에서 왔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면 내가 너무 무례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사실 다짜고짜 묻는 그가 더 무례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리저리한 과정을 거쳐 지금은 그냥 웬만하면 “한국에서 왔다”고 말한다. 그러는 편이 제일 간단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꼭 다음을 물었다.

북이에요, 남이에요?

“North or South?” 내가 북에서 왔는지, 남에서 왔는지는 왜 궁금한 걸까? 이진 아무래도 묻는 사람이 ‘나는 코리아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질문 같다. 이 물음에 나는 또 순순히 대답한다. “사우스에서 왔어요.” 강조해서 “물론(Of course) 남한 사람이죠.” 말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르겠다. 나는 정말 남한 사람일까? 우리 아버지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이다. 아버지는 6·25전쟁 때 월남했다. 한국

에서는 부모가 ‘탈북민’인 경우에는 본인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태어나도 ‘탈북’ 아동 청소년이라고 불린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영국에서 태어났다. ‘North or South?’ 질문을 받으면 이 아이들은 뭐라고 답할까? 부모 고향이 북이면 아이들도 북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나도 북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영국사람들이 별 뜻 없이 묻는 말에 나는 지금까지 별 뜻 없이 대답했다. 남과 북, 불과 한두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 경계가 흐릿하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할 거다. ‘아버지는 북한 출신이고 나는 남한에서 자랐어요. 그러니 내가 남과 북 어디 출신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친절하게 답해주면, 별 뜻 없이 묻은 사람은 코리아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출신 구분은 모호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겠다.

묻지 않는다.

“어디서 왔냐?”는 질문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알기에, 앞으로는 한국에서 만나는 이민자들에게 내 편에서 그걸 묻지는 않을 거다. 또 이곳에서 만나는 코리안이 북쪽 억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가 북한 출신인지 남한 출신인지 따져보지 않을 거다. 물론 궁금하긴 하지만, 몰라도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 학교 학부모들은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지만, 남한 사람들도 있다. 남한 출신 학부모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북한 사람들이 세운 학교지만, 남한 사람들도 자녀를 보내면, 정말 명실상부한 ‘한겨레’ 학교가 될 것

같다. 남한 학부모와 북한 학부모의 수를 ‘집계’해보고 싶어졌다. 그러다 마음을 고쳐먹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남북한 출신 구별 없이 배우는 학교라고 하면, 굳이 구별한 후에 다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구별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어디서 왔냐는 질문, 노스냐 사우스냐는 질문, 내게 묻는 것이 싫었던 그 질문을 이제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바뀐 자리에서 겨우 알게 된 것 중 하나이다. 어디서 왔냐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여기서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 다름을 존중하기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의 구별은 상대적이다. 무엇에 빗대어 보느냐에 따라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남과 북의 차이가 심각한 줄 알았다. 영국에 오니 그 차이는 소통을 어렵게 할 만큼 큰 것이 아니었다.

한국에서는 남북한의 언어와 문화가 분단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을 강조하고, ‘다름을 존중하자’는 말을 많이 했다. 그건 일종의 반작용이기도 했다.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동질성 논리’에 오랫동안 대세였기 때문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미덕이다. 나도 그 말을 많이 했다. 다른 점을 존중하려고 다른 점을 많이 찾았다. ‘이질화된’ 언어를 증명하려고 남북한 용어 사전을 만들었고, 달라진 사고방식이나 풍습을 찾아내고 두 사회체제의 상이함에서 그 달라진 이유를 설명했다.

영국에서 만난 북한 사람들과 한국어로 말하면서, 나는 소통의 어려움

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강한 함경도 억양에 익숙해지는 데 잠시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건 신경을 곤두세우고 영어를 알아들어야 하는 (그렇게 해도 다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공통점이다. 철자가 틀린 단어도 있고, 발음이나 표현이 다른 말도 있지만, 뜻을 이해하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면 된다. 사실 영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 억양의 차이는 서울 사람과 청진 사람의 억양 차이보다 몇 배는 더 심하다. 잉글랜드 남부 사람과 북부 사람의 발음은 확연히 다르고, 스코틀랜드 사람의 말은 영어와 유사한 다른 언어 같다. 인도 파키스탄 동유럽 이민자들도 많다. 그래도 다 소통한다. 이들은 언어의 차이를 예로 들며 다름을 존중하지는 말을 하지 않는다. 굳이 그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 사람마다 발음과 억양이 다른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다름을 존중'하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동안 '다름'을 별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살면, 사소한 다름도 커 보인다. 나는 이곳에서 오히려 남과 북의 공통점에 대해 더 크게 느낀다. 개개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은 일반적으로 옳다. 그러나 남과 북을 집단으로 묶고 그 두 집단 간의 다름을 자꾸 확인한 후에 존중하자고 말하는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그 '다름' 논리를 펼쳤을 때, 혹시 북한과 '다르고 싶어서' 그걸 강조한 것은 아닌지, 자문한다. 그 질문에 아니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가 없다.

비슷한 점을 인정하고 축하하기

우리 학교에서는 수업 전에 다 같이 노래를 부른다. 곡 중에는 고향의 봄, 반달, 오빠 생각 같은 것들도 있다. 아리랑 같은 민요는 물론이고, 동요 중에도 남과 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다. 놀이의 경우에도,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구슬치기, 딱지치기같이 내가 어릴 때 했던 놀이를 북한에서 온 학부모들도 다 했다. 엄마들이 어릴 때 고무줄놀이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놀이 방법도 그렇고, 남자아이들이 고무줄을 끊고 달아났다는 것까지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으로 각광 받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북한에 있다. 무궁화꽃이 아니라 해당꽃이라고 말하지만 놀이의 규칙은 같다. 남과 북의 음식도 다르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의 음식과 비교해 보면, 그냥 한식 안에서 양념 차이 정도이다. 뉴몰든에 있는 한국 식당에는 북한 출신 주방장이 많다고 하는데 나는 맛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그저 영국에서 한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다.

나는 지금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말하고, 놀고, 먹고, 사는 방식에서 비슷한 점을 훨씬 많이 본다. 다른 점을 드러내고 그걸 존중하자고 말하기 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어떤 이는 나와 달라서 불편할 때도 있지만, 따져보면 그건 그가 ‘북한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는 가급적 개인의 특성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 관용과 존중

우리 학교는 토요일에 교회 건물을 빌려서 수업을 한다. 연합개혁교회(United Reformed Church, URC)라는 장로교 계열 교단이다. 개학을 앞두고 참고 정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담임 목사를 만났다. 피터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관용법(Toleration Act, 1688)” 이야기가 나왔다. 영국에서 국교회가 아닌 다른 기독교 교단의 종교 행위를 허용한 법이란다. 장로교의 예배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도 이 관용법 이후이란다. 나중에 찾아보니 이 법에서 허용하는 종교의 자유는 개신교에 국한된 것이라, 그 관용의 대상에는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물론 가톨릭도 포함되지 않았다(나는 가톨릭이다). 또한 관용법으로 국교회가 아닌 기독교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 ‘관용’이란 그런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주는 존재가 외부에 있다. 누구에게 얼마만큼 관용을 ‘베풀 것인가’도 그가 정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관용하는 자와 관용의 대상이 되는 자는 동등하지 않다. 피터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

“URC는 영국에서 큰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요. 영국에는 여전히 국교회의 힘이 가장 커요. 같은 기독교이지만, 모든 교회가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죠. ‘관용’이라는 말은 불평등하고 약자에게는 공허해요.”

“그럼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이번에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에서는 ‘존중(Respect)’을 슬로건으로 삼았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이 아니라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학교에는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저는 남한 사람으로 때때로 북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데는 ‘관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교만이었네요.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흔하게 쓰여서 그 의미를 굳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게 되는 말들이 있다. ‘존중’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바뀐 자리에서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다. 나는 영국에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상호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북한 여성의 '이주', 그리고 평화·통일교육

엄현숙 |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원

들어가며

사회주의 체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목표가 다른 어떤 고려 사항보다 우선된다. 이에 사회는 수직적 위계에 의한 정치적이며 행정적 관계를 통해 지배된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모든 자원을 자연스럽게 당이 재분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중앙집권화된 사회주의 경제를 누가 운영하는가의 질문은 재화는 누구에 의해 재분배되는가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생산이나 경쟁력 같은 개념들은 경시되고 관료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구조가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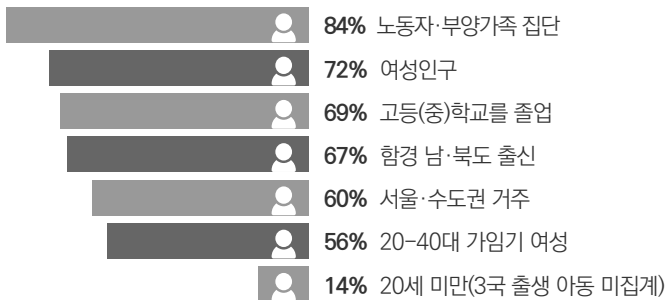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기제는 배급제이다. 배급제는 세대 단위로 시행되었고 인민은 직장 단위로 배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 사회통념상 세대주는 기본적으로 남성이며 이 세대주는 배급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은 사회주의의 핵심 기제

인 배급제를 붕괴시켰다.¹ 이 시기 직장을 통한 식량 공급이 끊긴 세대가 다수였다. 이에 여성들이 비공식 영역인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였다.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던 과거에서 개인이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엄중한 삶의 세계가 도래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는 미처 적응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 사이를 비공식 영역으로 불리는 시장이 파고들었고, 시장을 통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필수로 부상하면서 북한은 여성의 ‘이주’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 탈북과 단절의 경험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은 그들의 성장 잠재력 및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²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은 33,760명(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다음의 숫자로 나열할 수 있다.



1 물론 배급제가 붕괴되었다고 하는 말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배급제 붕괴는 '전체 북한 주민에 한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이 글에서 그들은 33,760명(2021년 6월 말 기준) 중 72%를 차지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남북하나재단에서 꾸준히 집계하는 탈북민의 사회 정착도는 향상되고 있다. 경제활동의 주요 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6.5%에서 2020년 60.1%로 상승했다. 고용률은 2011년 49.7%에서 2020년 54.4%로 증가하였다.³ 이중 남성 고용률은 70.6%, 여성 고용률은 49.3%로 나타났다.⁴ 2021년 1월 21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 기관 전문가 간담회에서 밝힌 일반 국민 중 여성 고용률은 61%, 이 중 30-40대 기혼여성 고용률은 55%이다.⁵

흔히 사회에서 경력 단절은 인적자원의 생산성 감소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는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1호에 의해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된다. 이승현·박영일⁶에 의하면,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은 ① 개인이나 가정 또는 사업장 등의 사정에 의해 일정 기간 취업이 중단되거나 ② 이제까지 해온 일이 아닌 다른 일자리로 이동한 상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의하면, 여성의 경력 단절은 여성의 생애 주기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이자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에 의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의미보다는 가사와 양육 등 외부적 환경적 요인

3 남북하나재단 (2021).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https://www.koreahana.or.kr/data_room/pro_data.jsp(검색일: 2021.10.05.).

4 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47쪽.

5 여성가족부 (2021). 30~40대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 제3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16>(검색일: 2021.10.05.).

6 이승현·박영일 (2017). 고학력 30대 한국여성들의 퇴직과 경력단절에 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14(3), 45-68쪽.

에 의해 불가피하게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내포한다.

다시 북한 여성의 '이주'라는 시각으로 돌아가면, 사전적 의미로 경력(經歷)은 ①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직업이나 학력 따위의 일 ②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지내 옴을 의미한다. 또한 단절(斷絶)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나 교류 등을 끊어버림이다. 이에 경력 단절은 지금까지 겪어 온 직업이나 학력이 어떤 대상과 관계나 교류를 끊어버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 된다. 이에 북한 여성의 '이주'는 탈북으로 인한 삶의 단절이자 기존의 북한 체제를 통해 산출되었던 젠더 수행성이 사회적, 도덕적, 규범적으로 상이한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마주하게 된 현실이자 경험이다.

■ 근대화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

한국에 정착한 '사회 경제적 소수자' 탈북민이 체험하는 세상과 그에 따른 만족감, 살아가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착에 필요한 자산과 네트워크는 절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1) 정착에 대한 불안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 자본과 학력 자본, 사회 자본이 없거나 미비하다. 탈북으로 인한 사회적 자산과 사회적 관계의 상실에 따른 어려움은 정착하는 것에 있어 어찌먼 자연스러운 것이다. 새롭고 현대화된 시스템에 “빨리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생존의 원칙과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자녀 양육까지 개

인이 삶을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과중한 책임"이라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된,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즉 모든 것을 책임져주던 시스템에서 공백을 자신이 직접 메꿔야 한다는 몸으로 경험되는 현실만으로도 정착에 커다란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선택’이 일상이 된 한국, ‘선택’이 제한된 북한⁷

“남한 생활은 대부분이 ‘선택’이고 그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 ‘선택’이 얼마나 낯선 것이고 불편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별것 아닌 간장 한 병 사러 마트에 가서도 한참을 들여다보고 망설이고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너무 많아서 ‘선택’ 받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할인 문구가 붙은 상품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고릅니다. 오히려 한참을 고르다가 아무것도 사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제일 좋고 가격 또한 괜찮다 싶어 얼른 샀는데, 나중에 몇 발자국 못가 똑같은 제품이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걸 보고 후회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환불받고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그와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여기저기 자꾸만 둘러보고 했는데 그 또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뭐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7 진나리 (2016). 탈북인의 낮은 목소리: 정착의 또 다른 이름 ‘선택’.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7133.html>.

여기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신분 상승의 발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갖대로 직업의 만족도를 매길까? 직업에 대해서 갖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란 과연 무엇인가? 경쟁 사회에서 잘난 척해야 하고 자신을 잘 포장해서 파는 것에 익숙해야 하고 노동시장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질문을 던진다. 직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먼저 요구하는 것에 반하여 관계 중심적 노동 의식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은 낮게 평가가 되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는 노이로제적 제반 불안, 자유에 대한 불안, 자립에 대한 불안, 변화에 대한 불안을 낳는다.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상품들, 생활양식, 제반 풍경, 다양한 제안과 제공,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해 매일 같이 과도한 심리적 요구도 받고 있다.



새롭게 ‘적응’ 해야 할 사회⁸

“‘적응’의 시기를 보낼 때 가장 많이 들던 말은 바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입니다. 당시 저는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왔으니 ‘당연히 법을 잘 지키라’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응’ 과정에 법을 몰라 문제를 일으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일상이 법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상의 모든 것에 나름의 규칙이 있었고 이를 잘 따르는 것이 곧 ‘적응’이었습니다.

8 진나리 (2016). 탈북인의 낮은 목소리: ‘로마에 오면’.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6444.html>.

그런데 그러한 규칙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것,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로 넘쳐났습니다. 우리의 '적응'은 그러한 것로부터 수많은 시행착오와 후회와 경험의 순간들에 의존합니다. 여기에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탓해봐야 소용없고, 흐르는 세월 붙잡아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넋 놓고 볼 부은 소리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에 쫓기듯, 무언가에 홀린 듯 정신없이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남이 달리기에 같이 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왔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하였기에 멈출 수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북한 체제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에서 비롯되어 삶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험, 나아가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게 한다는 데 있다.

2) 재사회화

학교는 특정한 가치를 주입하고 부과하는 작업을 통해 정통적인 문화를 따르도록 하는 일반적이며 이항 가능한 성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북한이라는 사회를 떠나옴으로 인해 필수로 되어버린 재사회화, 재교육은 이를 받는 것만이 유일한 과제가 된다. 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에서 오는 극복하기 어려운 열등감과 자존심의 손상을 동반한다.

20-40대의 핵심 노동인구는 우선, 이른바 북한의 자비로 부여받은 전문 지식, 즉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 교육, 실습, 직업 연한, 경험과 삶이 무시, 효력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 이는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또한 20-40대의 핵심 노동인구는 교육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받았지만, 사회생활은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에서 시작해야 했던 문화적 충격을 그 어느 세대보다도 심각하게 겪어야만 한다. 나아가 20-40대의 핵심 노동인구는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훈련도 받지 못했으며 남한의 취업 현장에 뛰어들어야만 했고 탈북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된다.

3) 양육의 차이

특히 여성들이 정착 과정에 겪는 스트레스는 일과 육아의 병행으로 더욱 증가한다. 실제 동독의 경우에도 가장 큰 희생자는 여성이었으며 이로써 "통일 최대의 희생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이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해주던 정책에서 자녀 양육과 직장이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 중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48.2%로 15세-54세 여성 10명 중 5명이 경력 단절을 겪는다.⁹ 이 가운데 결혼, 임신·출산, 육아·자녀

9 김난주 (2016).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분석. 산업관계연구, 26(3), 2쪽.

돌봄, 가족 돌봄 중 육아가 42.5%로 가장 높다.¹⁰ 그렇다면 북한이탈여성의 경우는 어떠한가?

〈표1〉 북한이탈여성의 연령대별 여성 취업 장애요인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가사 부담
전체	19,809	40.1	16.3	13.1
20대	3,153	48.9	14.8	14.6
30대	5,178	52.6	14.1	14.7
40대	6,761	29.5	18.6	11.9
50대 이상	4,360	35.5	16.0	12.3
전체	불평등한 근로 여건	여성의 능력 부족	구인 정보 부족	기타
20대	11.3	6.5	2.5	1.7
30대	10.7	4.1	1.3	0.2
40대	8.2	2.9	2.8	0.3
50대 이상	14.7	8.4	2.6	2.4

자료: 장인숙, 『통계로 보는 북한이탈여성의 삶』¹¹

위의 표에 의하면,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가사 부담, 불평등한 근로 여건, 여성의 능력 부족, 구인 정보 부족 등 여러 보기 문항 중 단연 육아 부담이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탈북 여성이 피할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지점이 아이 양육과 교육이다. 더군다나 약 53%는 아버지가 없거나 부재한 한 부모 가정이다.¹² 그

10 여성가족부. 30~40대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16>

11 장인숙 (2018). 통계로 보는 북한이탈여성의 삶. 여성학회·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공동학술포럼 〈여성과 분단체제의 안과 밖〉, 7쪽.

12 한 통일전담교육사는 탈북민 가정환경을 해체 가정, 이혼 가정, 재혼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

래서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경제력’은 꿈도 못 꾸다. 엄마 역시 적응하기 바쁘고 생계를 유지하기에 바쁘다. 오히려 아이의 입장에서 기댈 곳은 부모가 아니며 오히려 부모의 정착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부른다.¹³

■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소외의 경험

탈북민으로 전문 영역에서 경험된 사회적 배제는 여타 연구들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사례이다. 이는 ①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스트레스와 ② 능력에 합당한 자리매김의 어려움으로 대표된다.

임희경, 한재희¹⁴에 의하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 다시 공부하면서 겪는 고충, 한국의 전문 분야에서 비전문가로 취급받아 스트레스를 경험, 전문가로서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해 느낀 갈등, 한국에서 학력에 합당한 자리를 찾지 못해 느낀 한계, 한국에서 학력 불인정으로 인한 좌절, 한국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겪는 갈등 등으로 정리된다. 반면에 지식의 실천을 통해 확인한 존재감으로는 북한에서 쌓은 지식을 한국에서 실천한 경우를 꼽는데, 그 유형에는 북한 엘리트의 지식과 경력을 한국에서 인정받을 때, 지식과 학력이 자기 가치와 자기 존재를 확고히 할 때이다.

김화순¹⁵에 의하면, 탈북민이 학력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적 지위와 일자리 영역에서 차별을 인식, 북한에서 구

정, 무연고 가정, 친인척 가정, 형제 가정 등으로 요약하였다.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터뷰 중에서(2021.09.24.).

14 임희경 한재희(2017). 고학력 지식인 탈북자가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현상. 한국상담학회, 18(4).

15 김화순(2010).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에 대한 인식. 통일과 평화, 2(2).

축한 자신의 실무 경험이 한국 내 북한 연구 분야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의식이 있으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학력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경험한 차별과 좌절에 대해 언급한다.

강진웅¹⁶은 형식적인 법적 시민권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은 '사회적 시민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시민권의 이원화된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탈북민의 자활 능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적 요인들에 개별 주체들의 언어, 교육, 직업능력, 체제와 문화의 차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을 꼽는다. 이른바 한국 사회의 규율적 거버넌스는 새로운 시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소수자 집단으로서의 탈북민을 재사회화시키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확장된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통치의 기제로서 제도적 뒤 받침을 안정적인 한국 정착 지원의 우선 목표로 보고 있다.



남한 교육현장에서의 탈북 교사¹⁷

사상과 제도, 이념이 서로 다른 북한에서 교사를 했을지라도 이들은 엄연하게 교사이다. 정착 현장에서는 그들의 경력이 인정되고 있지 않고 윤곽적으로 볼 때 그들은 그냥 탈북민에 불과하다.

얼마 전 통일부에서 탈북 교사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이들의 명칭 문제를

16 강진웅 (2011).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거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회학, 45(1).

17 ○○○ (2018). 남한 교육현장에서의 탈북교사. 통일미래교육학(2018.04.27.) 발표문 중에서 일부 발췌.

놓고 교육부에 제도적 및 법적인 문제가 걸린 교사라는 자격을 부여하지 못해도 명칭만이라도 <탈북학생전담교사>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거절당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교사가 되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북한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교사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교사라는 명칭을 함부로 붙이겠냐,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등의 반대로 결국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로부터 <통일전담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체육전담교사 영양교사 등 정교사 이외에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교사라는 명칭이 탈북 교사들에게는 붙여지기가 쉽지 않다.

약간의 관심과 이해와 양보 나아가서는 통일된 대한민국의 통합교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해결될 수도 있는 몇 명 안 되는 학교 현장의 탈북 교사들 명칭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데 정작 통일이 되면 수많은 북한 교사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많고 학교에서도 우리는 탈북민이구나 하는 좌절감을 한 번쯤은 다들 겪어봤을 것이다.

교육은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특정한 가치와 성향을 길러준다. 지식은 국가에 의해 선정된다.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즉, 기술은 연습하면 되지만, 가치관과 성향 및 의식 신장은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본 대상이 교사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라는 점을 생각할 때, 북한에서 온 교사라는 경력만으로는 선택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도 존재함이 사실이

다. 이로부터 이른바 사회의 규율과 시스템에 따른, 즉 서로 다른 문법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에 의해 길러지는 성향은 문화 획득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자격만이 권리와 의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인시켜 주며 이는 교육시스템이 만들어내는 효과이다.

나가며

탈북과 입국, 강렬한 만큼 공허함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강렬하고 매력적이나 텅 빈 기호”¹⁸에 해당하는 ‘통일’ 담론에 사회적 거리감을 좁혀야 한다. 누구나 과거가 있고 경력이 존재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과거 경력만을 떠올리며 자존심과 인정 투쟁을 하면서 있을 수는 없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스템에 유입이 된 이상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오늘은 이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 탈북민이자 여성, 북한학 연구자로 겪는 경험에 대해 풀어보았다.

남북한을 경험한 탈북민은 이상의 여러 상황에 노출되어 녹록지 않은 한국 생활을 시작하였다. 분명한 점은 결국 이들에게 통일 후 북한을 재건하고 더 나은 미래세계를 구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혼자만의 역량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일정 정도 관여해야 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탈북청소년의 어머니들 역시 정착 기간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경제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인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할 북한 ‘이주’ 여성들이, 양육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짐이 되는 것이다. 이에 교육을 담당하

18 남원진 (2011).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담의 양식. 서울: 도서출판 경진, 60쪽.

는 학교와 선생님들의 장기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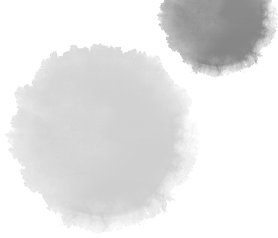
현재 한국 내 탈북민 거주 지역은 도시이며 대표적으로는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이다. 이에 탈북민 가정 및 탈북학생 등을 다수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이 지역에 한정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교육자들이 이들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문화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관심이 곧 세상과 소통하고 글로벌 시대 평화적 공존으로 가는 길이다. 이에 우리 주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곧 평화고 통일이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웅 (2011).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거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회학*, 45(1), 191-277.
- 김난주 (2016).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분석. *산업관계연구*, 26(2), 1-27.
- 김화순 (2010).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에 대한 인식. *통일과 평화*, 2(2), 76-110.
- 남북하나재단 (2021).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https://www.koreahana.or.kr/data_room/pro_data.jsp(검색일: 2021.10.05.)
- 남원진 (2011).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달의 양식. 서울: 도서출판 경진.
- 여성가족부 (2021). 30-40대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 제3차 여성 고용 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16>(검색일: 2021.10.05.)
- 이승현·박영일 (2017). 고학력 30대 한국여성들의 퇴직과 경력단절에 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14(3), 45-68.
- 임희경·한채희 (2017). 고학력 지식인 탈북자가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현상. *한국상담학회*, 18(4), 103-124.
- 장인숙 (2018). 통계로 보는 북한이탈여성의 삶. 여성학회·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공동학술포럼 〈여성과 분단체제의 안과 밖〉.

- 진나리 (2016). 탈북인의 낮은 목소리 정착의 또다른 이름 '선택'.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7133.html>(검색일: 2021.10.05.)
- 진나리 (2016). 탈북인의 낮은 목소리 '로마에 오면'.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6444.html>(검색일: 2021.10.05.)



평화교육, 평화라는 퍼즐을 맞춰가는 희망의 한 조각

Dan Gudgeon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문위원

평화학 이론은 평화교육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까? 평화학은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 갈등 해결을 초월하여 과거의 상처 치유와 적대적 당사자들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창출을 포함한 갈등 전환과 화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평화학에 의하면 갈등의 평화적 전환은 국제적 차원에서 정치권력자들이 협상 절차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평화협정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화협정의 체결은 갈등 전환의 시작점일 뿐이다. 평화학에는 이웃 국가의 국제 수준, 갈등 당사자의 수준, 그리고 사회 내부 수준에서 변화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평화 구축 노력은 여러 수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때, 갈등 전환의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주장한다. 결국 자주 방치되는 사회 내부의 갈등 구조 해체와 갈등 문화의 변화가 갈등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해결 과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갈등의 평화적 전환에 있어서 평화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

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평화학의 운동 측면과 평화교육의 융합

평화교육은 당연히 교육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 평화교육을 평화 구축의 일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평화학에 의하면 사회 연구는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국 연구자의 가치가 숨겨진 채로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평화학은 평화라는 가치를 명백하게 드러내면서 평화와 비폭력을 긍정적 가치로 전제하며, 전쟁과 폭력을 부정적 가치로 전제한다.¹ 이에 따라 평화학은 세계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과 피교육자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실천적인 교육 과정이다. 다시 말해 이 실천적 특성은 평화학의 운동적 측면을 보여주며 평화학자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목표이다. 평화는 한순간에 성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매우 다양한 기제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 평화교육은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평화학처럼 평화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행동적 측면이 있는 실천적인 학습이다. 물리적 폭력이 많은 사회만이 아니라 평온하게 보이는 사회도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없애고 적극적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평화교육의 실행이 필수적이다. 적극적 평화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제거하는 작업과 동시에 더 정의로운 사회 제도와

1 김동진 (2013).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16(3), 33쪽.

공정하고 균형이 있는 집단 간 권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세계시민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 교육은 한국에서 적극적 평화로 발전하는 과정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큰 갈등을 경험하고 갈등이 지속되는 한반도 지역에서 남북한 갈등 당사자들 간의 관계 회복과 평화 구축 과정의 지속성을 부여하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

■ 어떤 평화교육이 필요한가?

사회정치적 배경		평화교육 방식	평화교육의 목표
고착화된 갈등 지역		갈등 상대에 대한 이해, 존중, 관용, 결국에 공존 연습	상대방에 대한 인식 변화
물리적 폭력이 없으나 인종·민족적 긴장 존재		폭력 예방, 동료조정, 갈등 해결	갈등을 다루는 기술 습득
협력적이고 평온한 지역	선진국	평화 감수성 제고	적극적 평화에 대한 의식화
	개발도상국	인권 증진	

평화교육에는 다양한 형태와 폭넓은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일교육, 다문화 교육, 인권 교육, 비폭력 소통 교육, 평화 감수성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 평화교육학자 살로몬(Salomon)은 많은 형태와 주제들을 다 평화교육에 포함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한다. 살로몬에 의하면 평화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평화교육의 목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는 한, 이론적·실용적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² 또한 살로몬은 평화

2 Salomon, G. & Nevo, B.(Eds.), *Peace education: The concept, principles, and practices around the world*, New York: Psychology Press, pp. 3-13

교육이 진행되는 각 지역의 정치 상황에 따라 평화교육의 종류가 따로 있으며, 개념적 차이가 있다고 한다.

사회정치적 배경		평화교육의 목표
고착화된 갈등 지역		선악 담론(narrative)으로 지속화. 집단 기억, 피해 의식 도덕적 우월성
물리적 폭력이 없으나 인종·민족적 긴장 존재		물리적 폭력과 분쟁에 대한 집단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 원주민과 정착민 공존하는 사회
협력적이고 평온한 지역	선진국	평화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교육이다.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높인다.
	개발도상국	

이 범주화에 의하면 갈등과 긴장 지역에서는 평화교육이 폭력 예방(소극적 평화)을 강조하며 평화교육의 목표는 적과 공존을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교육은 집단의식 차원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반면에 평온한 지역에서는 평화교육이 협력과 조화(적극적 평화)를 강조하며 전체적인 평화 문화를 촉진하려고 한다. 이 교육은 개인 인식과 기술 습득 차원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각 종류와 개념적 차이에 따라 평화교육의 추정, 직면하게 되는 도전적 지점, 방식과 목표가 다 다르며 하나의 범위에 이 다양한 평화교육 방식을 묶는 것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살로몬은 각 지역의 평화교육 맥락과 목표가 다르니 평화교육에 대한 확실한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개념을 확정할 경우에만 종류 간 함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³

위 분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범주화는 한국에서 어떠한 평화교육이 필요한지를 유추하고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아래에서

3 Ibid, p. 12

는 분석 대상으로 세 가지 다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고착화된 갈등에 직면하고 북한을 상대하는 대한민국, 둘째,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셋째, 평화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대한민국이다. 이 세 가지 특성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고착화된 갈등을 경험하는 대한민국

한반도 갈등은 고착화된 갈등으로 볼 수 있다. 고착화된 갈등은 여러 측면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 갈등에는 매우 심각한 물리적 폭력이 있었으며 갈등이 장기화(70년 이상)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남한 혹은 북한 주민 상대방을 타자화하고 양자의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갈등은 갈등의 모든 측면을 제로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재생산하고 있다.⁴ 갈등은 사회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이런 뿌리 깊은, 한 세대 이상 지속되는 “갈등을 겪는 사회는 물질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러야 할 대가가 상당하다.”⁵ 그리고 이 “갈등은 총체적(total)이다. 이것은 상대방이 가하는 위협이 자기 집단의 생존과 직결된 총체적인 문제로 인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체성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⁶

4 박주화·이민규·최훈석·권영미·Steven Sloman·Eran Halperin (2019). 2019년 한국인의 평화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19쪽.

5 허지영 (2021). 고질갈등 이론을 통해 살펴본 한반도 갈등과 갈등의 평화적 전환 접근 방안 연구. 평화학연구, 22(1), 78쪽.

6 위의 글, 78쪽.

폭력성이 많은 갈등을 경험한 사회는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 기제를 발현한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고 논리적이고 정리된 시각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세계관이 필요하다. 이 세계관은 이분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 틀 안에서 집단정체성이 본질적으로 '선한 우리(good self)'와 '악한 타자(evil other)'로 나뉘어 있다. 갈등의 스트레스와 혼선을 극복하기 위해 갈등에 대한 내러티브(서사)가 필요하다. 이것은 갈등이 발생한 이유와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가져야 하는 대책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공한다. 결국에 갈등 내러티브에 따른 '집단 기억'이 형성되는데, 이 집단 기억은 선택적이면서 후대에 전달될 때 현 사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향되고 왜곡될 수 있다. 갈등 내러티브가 갈등의 트라우마, 희생, 영광, 영웅, 상징과 신화 등 능동적으로 이분법적 집단정체성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고 결정된다. 이 내러티브가 자기 집단의 정당성과 행동을 합리화하고 동시에 타자의 정당성을 훼손하며 심지어 비인간화, 악마화하기도 한다. 집단 정체성과 갈등 내러티브가 합쳐져서 갈등 문화로 각 사회 산물에(교육, 군사, 정치, 언론, 언어, 상징) 제도화된다. 강진웅은 냉전시대 교육에 대해서 "반공과 반미를 통해 분단교육을 강화하는 기제는 거의 흡사한 것이었다... 이러한 적대적인 학교교육은 전사회의 군사문화로 발전했다"고 한다.⁷ 갈등 문화는 사회의 가능한 이념 틀을 결정한다. 이 맥락에는 국민들이 '모호한 평화'를 주의해야 하고 기존의 질서와 친숙한 것만 유지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 갈등 문화는 신념으로 굳어져 변화시키기 어렵다. 남북한은 양측에 대한 적대와 혐오, 즉 갈등 문화를 변화시켜야

7 강진웅 (2015). 한국사회의 종족적 민족주의와 다문화 통일교육. 교육문화연구, 21(3), 260-261 쪽.

갈등의 궁극적 전환이 가능하다.

평화적 갈등 전환 단계를 진입하기 위하여 갈등 문화가 해체되는 해동(unfreezing)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기존 갈등 문화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갈등과 '적'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회에서 출현하고 이에 따른 기존과 새로운 아이디어 사이에 긴장과 충돌이 생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흡수되면, 사회 내부에서 갈등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새로운 매개 신념이 출현하고 이 매개 신념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에서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살로몬에 의하면 평화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상대방의 집단 담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고착화된 갈등 지역의 평화교육은 네 가지 상호 관련된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는 타자의 집단 담론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이것이 상대방의 갈등 내러티브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하고 실제(역사적)사건에 대해 두 개의 관점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 집단이 갈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며 이 과정이 없을 경우, 새로운 공통적 현실을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셋째는 타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할 의지이며 이 공감을 구성하기 위해 인식적인 접근보다 정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상대방과 접근에 있어서 비폭력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이며, 이 의지는 갈등 다루기를 하게 될 때 폭력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합의와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살로몬의 결론에 따르면 고착화된 갈등 중인 한반도에서는 평화교육을 공존 연습과 상대방의 집단 담론(갈등 내러티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공존 연습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고착화된 갈등을 전환과 평화 구축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한국의 갈등 문화 변화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평화교육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꼭 다루어야 한다.

■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가고 있는 대한민국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에서 무정부 상태에서 생존은 핵심 국익이다. 생존은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안보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평화학자들은 이 논리가 국가안보를 위한 끝없는 자원의 배정을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친구와 적을 발생시키는 정치적 기능을 통해 지구에서 위협을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개인과 소수집단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이 서구 국가에서 봤듯이 정부가 국가안보라고 주장했던 정책은 사실상 국가 내의 치열한 사회 분열을 초래했다. 그 당시 국가안보 정책은 특히 국내 무슬림 사회와의 갈등을 초래했는데, 이 때문에 참전 서구 국가 내 소수 인종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국가안보는 외부로는 군사 경쟁을, 내부로는 소수집단과 사회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평화학에서는 안보가 개인과 전 인류로 확장하면서 평화가 안보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탈냉전 세계화 흐름 속에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시민성 개념은 국가안보 대신 개인과 전 인류 차원에서 비전을 펼치고 있다. 유네스코는 시민에 대하여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가는 다른 시민들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더불어 책임을 다하

는 사람”이라며 “시민 앞에 세계라는 말이 붙어있는, 세계시민은 세계라는 공동체”가 된다고 본다.⁸ 국경과 군사를 신성화하는 국가안보가 이 세계 공동체 구성 절차에 핵심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배타적으로 사회를 분리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특히 냉전 시절에 국가안보는 ‘우리’와 ‘그들’을 규정했으며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공포와 두려움, 적대와 혐오의 메시지를 한국 사회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했다.⁹ 오늘날도 한국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동아시아 지역과 남북 관계에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민족주의 개념이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구갑우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안보와 민족(과 통일)이 신성불가침한 개념들이며 한국에서 분단을 지속시키는 핵심 장치라고 지적한다.¹⁰ 민족주의는 한편으로 일제강점기 때처럼 주민들을 통합시키고 착취에 대한 강력한 저항 관념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민족주의는 국가안보처럼 내부와 외부, 즉 ‘우리’와 ‘그들’을 분리시키고 연대의 공간을 제한할 수 있다.

남북 공동을 찾을 때 상식적으로 ‘민족’이 남북 관계를 발전하고 통합시키는 개념으로 비할 데 없는 유일한 도구처럼 보인다. 하지만 강진웅은 한국 민족주의가 통일·다문화 교육의 함의에 대해서 정리한 바가 있으며 민족주의의 문제를 지적한다. 수평적이던 민족주의 개념은 이제 대한민국 국가 자체가 강조되면서 수직적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같은 민족’이라도 ‘민족’ 개념에서 배제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민족과 외국뿐만

8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세계시민교육. <https://asp.unesco.or.kr/세계시민교육/>

9 문아영·이대훈 (2019). 분단체제를 살아내며 넘나드는 탈분단 평화교육. 서울: 피스모모, 5쪽.

10 위의 책, 19쪽.

아니라 주류와 소수로 나누어진 한국에서 평화교육은 다문화, 탈북자와 북한 중에 한 주제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제와 대상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냉전 시대 남북한은 종족적 순수성과 민족의 통일을 앞세우면서 상대 정권을 배제, 악마화하는 종족적, 민족주의를 통해 분단 정치를 고착화하고 군사력 경쟁을 정당화했다. 21세기 탈냉전 세계화 시대를 맞아 적대적인 분단 교육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동시에 탈북자, 조선족과 노동·결혼 등으로 외국인 이민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혈통 중심의 시민권이 부분적으로 파열되었다. 대신에 대한민국의 국가를 바탕으로 정체성은 강화되었다. 이러한 파열 내에 사회가 더 위계화되었다. “대한민국 중심의 국가 정체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념적, 경제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취급된 조선족과 탈북자들 그리고 종족적, 경제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간주된 외국인들이 다문화 한국 사회의 소수자 집단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는 분단을 극복하는 남북 통합의 과제와 탈북자와 조선족을 포함한 다문화 소수자 집단을 포용하는 사회통합의 과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제 한반도에서는 국가안보와 위계화된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타자와 공감하는 태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 타자는 다문화, 탈북자, 조선족 또는 북한 주민일 수 있다. 최종적으로 동질성을 형성(다문화 경우) 또는 회복(같은 민족 경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와 남북 차원에서 이질성·혼성성(hybridity)을 이해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갈통(Galtung)의 갈등 삼각지처럼 차별을 공감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소수집단을 대한민국 주류 사회 시민으로 동화시키는 과정을 시도하

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두가 북한과 국내 소수자 집단을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통합된 시민들을 육성하는 것이 현대에 요구되는 대책이다. 또한 이렇게 육성된 시민은 민족주의와 국경을 넘어서 세계시민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살로몬의 결론에 의하면 이런 민족적 긴장이 있는 지역에서 갈등을 다루는 기술 습득 교육이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평화학의 차이에 대한 접근법을 떠올린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창조적 상상력에 기초하여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차이가 존재할 때 그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그 과정을 동료 조정이나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평화교육에는 갈등을 다루는 기술 습득 교육이 꼭 다루어져야 한다.

■ 평화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대한민국

평화 구축 노력은 전 사회를 포함하는 참여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화학의 중요한 지적이다. 전통적인 국제 안보 관점에서 국가 지도자들은 전쟁과 평화에 대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평화 구축 과정에 상호의존 격차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 집단 간 평화 구축은 정치·군사 지도자와 같은 고위층의 역할 및 행위에 집중된 경우가 많다. 지속성과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위해 평화 구축은 다양한 집단·계층들의 다양한 행위와 역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평화 구축 과정에는 한(고위)층에서 과정을 독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층의 참여가 필요한

것을 늦어진 후에만 인식한다.¹¹ 지난 2018년에 잠시 보였던 한반도의 평화 과정은 청와대가 모든 과정을 통제하다가 협상이 결렬됐을 때 이 수직적 상호의존 격차 문제가 드러났다. 레드락(Lederach)은 평화와 화해를 추진할 행위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갈등을 다루기 위해 국제 지도자와 국가 지도자들의 역할이 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합의의 시행을 위해 사회 구성원을 준비시키는 지역 차원의 행위자를 대체할 수는 없다.”¹² 램스버섬 등에 따르면 “엘리트층이 정치적 타결로 이뤄내는 얕은 화해(shallow reconciliation)와 엘리트층뿐만 아니라 제도와 사회가 완전히 관여된 더욱 깊은 화해(deeper reconciliation)를 구분 지을 수 있다.”¹³ 이 견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 지도자가 아닌 행위자들 역시 평화 구축과 화해 작업에 큰 역할을 한다.

한반도에서는 권위주의 통치 역사와 유산이 남아 있으며 남북 평화 과정이 주로 하향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평화 과정에서 자신의 주체성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의 인생이 평화 과정과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인식이 있다. 또한 위계적 사회에서 권력이 맨 위에 집중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들어줄 권력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무력하고 주체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남북 관계와 통일 국가의 미래 형태에 대해 논의하고 담론 공백을 메우는 매우 어려운 작업에 참여해 달라고 설득하기 어렵다. 정의의 격차라는 것이

11 김동진 (2013).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적 접근. 28쪽.

12 Lederach, J. P. & Appleby, R. S. (2010). Strategic Peacebuilding: An Overview. In Philpot, D. & Powers, G.(Eds.), *Strategies of Peace: Transforming Conflict in a Violent World*(pp. 19-4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27

13 Ramsbotham, O. & Woodhouse, T. & Miall, H. (2016).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Fourth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p. 288.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의의 격차는 평화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주어진 평화 간의 격차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평화협정이나 합의를 통해 갈등 집단 간 직접적 폭력뿐 아니라 구조적 폭력의 근원이 제거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 폭력이 감소하더라도 사회의 정의에 대한 기대는 쉽게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¹⁴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평화 과정에 대한 희망과 관심을 잃은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매일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때문에 어려운 통일 문제, 관심을 기울여도 바뀌지 않는 남북 관계에 대하여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통일 형태에 대해 고민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은 국가로서 한국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이 얻는 편익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이 있다.¹⁵ 이것은 남북 관계에 대한 무관심 현상을 초래한다. 문제는 평화 과정 지속성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평화 과정과 남북 관계에 대한 논의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만 미래의 남북 관계 형태에 대한 답론을 모두 구성하면 주민들이 계속 무관심과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차라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답론을 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평화교육은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답론 구성, 즉 공백 메우는 작업은 통일교육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일반 주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 의지와 이해를 함양할 수 있도록 평화

14 김동진 (2013).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 28쪽.

15 김병곤·서보혁·이동선·정재관·정성운·정옥식 (2019).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다. 서울: 통일교육원. 81쪽.

통일 교육은 피교육자가 본인의 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인식 형성과 평화가 주민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형성을 목표로 설정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교육자는 피교육자들이 평화가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하향식 정치 협상에 집중되어 있는 ‘평화 과정’ 외에 또 다른 전체 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평화’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살로몬이 평온한 지역에서 진행된다고 한 ‘평화에 대한 교육’이 한국에서도 필요하다. 평화의 다층 구조(정치 지도자의 참여만 아니라 풀뿌리부터 평화 과정에 참여 필요)와 평화와 일상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를 성공적으로 증진할 경우 피교육자들이 평화 과정에 참여 필요성을 공감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평화 과정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평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 평화 감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평화 감수성이 제고되면 피교육자들이 다른 지역의 물리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평화교육에서는 평화에 대한 교육을 꼭 다루어줘야 한다.

■ 평화교육 종류 간 통합된 접근법의 모색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살로몬의 세 가지 평화교육 종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착화된 갈등 맥락에서 갈등 문화를 해체하

고 북한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화교육이 필요하다. 소수집단이 많은 사회에서 서로 이해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 창의적으로 다루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평화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평화 과정과 평화와 인생과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관심과 참여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평화교육도 필요하다. 너무 큰 과제로 볼 수 있으며 아마 책상에 앉아서 지식을 배우는 학습이면 한 종류 평화교육과 주제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종류의 평화교육이 다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인 참여식 평화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경우, 한 종류 이상의 평화교육에 동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 구축과 사회 변화는 계산적인 방법을 넘어설 필요가 있으며,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을 더 활용해야 한다. 책상을 벗어나서 체육, 음악, 드라마, 미술과 같은 창의적이고 표현하는 활동을 평화교육 시간에 진행하면 평화 구축을 위한 에너지와 열정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인식 변화, 함께 사는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증가, 그리고 평화 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증진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함께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진웅 (2015). 한국사회의 종족적 민족주의와 다문화 통일교육. *교육문화연구*, 21(3), 253-275.
- 김동진 (2013).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16(3), 7-60.
- 김병곤·서보혁·이동선·정재관·정성운·정욱식 (2019).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다*. 서울: 통일교육원.
- 문아영·이대훈 (2019). *분단체제를 살아내며 넘나드는 탈분단 평화교육*. 서울: 피스모모.
- 박주화·이민규·최훈석·권영미·Steven Sloman·Eran Halperin (2019). *2019년 한국인의 평화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세계시민교육. <https://asp.unesco.or.kr/세계시민교육/> (검색일 : 2021.10.01.)
- 허지영 (2021). 고질갈등 이론을 통해 살펴본 한반도 갈등과 갈등의 평화적 전환 접근 방안 연구. *평화학연구*, 22(1), 75-99.
- Lederach, J. P. & Appleby, R. S. (2010). Strategic Peacebuilding: An Overview. In Philpot, D. & Powers, G.(Eds.), *Strategies of Peace: Transforming Conflict in a Violent World*(pp. 19-4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amsbotham, O. & Woodhouse, T. & Miall, H. (2016).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Fourth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 Salomon, G. & Nevo, B.(Eds.), *Peace education: The concept, principles, and practices around the world*, New York: Psychology Press.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한국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남상주



9 791190 615266
ISBN 979-11-90615-26-6

비매품/무료

03340

